http://dx.doi.org/10.35431/MINJOK.82.3

탈북학생 학업중단율의 변화 요인 분석*

– 사회경제적 여건과 교육지원정책의 변화를 중심으로

김 인 성 (고려대학교 공공정책연구소)
(feuille06@korea.ac.kr)

국문요약

본 연구에서는 2010년 이후의 탈북학생 학업중단율 감소 원인을 파악하고자 한다. 연구 대상은 두 가지다. 첫째는 북한이탈주민의 사회경제적 여건의 변화이다. 선행 연구성과들에 따르면 가정의 경제 수준, 부모의 소득과 취업 여부가 학업중단율과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둘째는 학업중단율 감소에 영향을 미친 탈북학생 교육지원정책의 변화이다. 연구 결과, 북한이탈주민의 사회경제적 여건의 변화와 탈북학생 학업중단율의 감소 간에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했다. 다른 한편, 2008년 탈북학생 교육지원정책의 수립과 2009년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의 개설이 2010년 이후의 급격한 학업중단율 감소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주제어 : 탈북학생, 북한이탈주민, 학업중단율, 교육지원정책, 사회경제적 여건,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

* 이 논문은 2022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1S1A5C2A03097574)

Ⅰ. 머리말

1. 문제제기

북한이탈주민이 본격적으로 한국에 입국하기 시작한 것은 1994년이다. 이전에도 탈북자들의 입국이 있었지만, 한 자릿수를 넘지 않았다. 한편, 북한의 식량난으로 인한 고난의 행군 시기인 1994년 52명으로 두 자릿수를 기록한 이후 1999년에 148명으로 세 자릿수를 기록하였고, 2002년에는 1,141명으로 탈북자가 급증하기 시작하였다(통일부 2003, 4장 3절). 이후 급증세는 꾸준히 이어져서 2009년에 2,914명의 탈북자가 입국하여 정점을 찍은 이후 2019년에는 1,047명으로 정점 시기 대비 약 1/3로 그 규모가 축소되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229명, 63명, 67명으로 탈북자의 숫자는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1] 20022년 현재 한국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의 누적 인원은 33,882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표 1〉 북한이탈주민 입국 현황

연도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합계
남(명)	424	515	573	608	662	591	795	404	369	305	251	302	188	168	202	72	40	35	9,510
여(명)	960	1,513	1,981	2,195	2,252	1,811	1,911	1,098	1,145	1,092	1,024	1,116	939	969	845	157	23	32	24,372
합계	1,384	2,028	2,554	2,803	2,914	2,402	2,706	1,502	1,514	1,397	1,275	1,418	1,127	1,137	1,047	229	63	67	33,882

출처: 통일부(2022). ※ 2022년 통계는 잠정치임

북한이탈주민의 증가로 인해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이와 관련한 공식적인 정부의 정책은 1997년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북한이탈주민지원법)」이 제정되면서 시작되었다. 북한이탈주민법은 기존의 「귀순북한동포보호법」을 대체하여 북한이탈주민이 한국 사회에 신속히 적응·정착할 수 있도록 보다 체계적으로 정책지원을 할 수 있는 체제를 정비했다는 의의를 지닌다. 이 법률을 토대로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 사무소(하나원),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 북한이탈주민후원회(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남북하나재단) 등을 설치하고 북한이탈주민이 자립·자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착 교육 프로그램, 심리 지원, 초기정착금과 학비 등의 재정

1) 다만, 이 시기는 코로나 감염증의 발생으로 탈북자의 이동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었던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지원이 이루어져 왔으며, 법률에 근거한 공식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정책은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인 한국 사회 정착과 사회·경제적인 여건의 향상을 견인하였다.

다른 한편, 북한이탈주민의 한국 입국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후로 10여 년간은 이들에 대한 인구·사회학적 통계의 관리는 최소한의 기초 자료 조사에 머물러 있었다. 이 기간에 수집된 통계들은 대체로 입국 현황(성별, 연령별, 출신지별, 직업별), 한국 내 지역별 거주 현황 등이 중심이었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구·사회학적 통계 관리의 부실은 이들에 대한 정부 지원의 성과와 한계에 대한 정밀한 분석을 어렵게 한 측면이 있다.

다행스러운 점은 2010년 3월 「북한이탈주민지원법」이 개정되어 제30조에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남북하나재단)의 주요 사업으로 '북한이탈주민 지원을 위한 정책개발 및 조사·연구 사업'과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실태조사 및 통계구축사업'이 규정되면서 체계적이고 광범위한 인구·사회학적 통계의 관리가 가능해졌다는 사실이다. 이 이후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통계조사를 시행하여 2011년부터 2015년까지는 「북한이탈주민 경제활동 실태」와 「북한이탈주민 사회조사」 보고서를 매년 발간하였고, 2016년 이후로는 「북한이탈주민 사회통합조사」와 「북한이탈주민 정착실태조사」 보고서로 명칭을 수정하여 매년 발간하고 있다. 또한 탈북청소년 현황을 조사하여 2011년 최초보고서 발간 후 2012부터 격년으로 「탈북청소년 실태조사」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2)]

2011년 이후 본격화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구·사회학적 통계 관리의 덕택에 정부의 각종 지원정책 및 사업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해졌다. 그렇지만 북한이탈주민의 한국 사회 정착과 관련된 상당수의 연구논문은 다양한 연구영역에서 정부 정책지원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정책 개선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정도에 머무르고 있다. 이러한 연구성과들은 정부 정책에 반영되어 꾸준한 정책 개선을 이루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정착초기 적응 중심으로부터 사회생활 전반적인 영역에 걸친 정책의 확대, 지속적인 법률 개정을 통한 지원정책의 개선안 마련, 한국 사회에의 동화 중심 정책으로부터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으로의 전환, 제3국 출생자와 무연고청소년 보호 등에 이르는 좀 더 정밀해진 지원 대상 범위 확대 등은 대부분 학계에서 논의되었던 내용들이다.

다른 한편,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부 지원정책의 긍정적인 역할과 그 성과에 대한 평가는 제한적으로만 이루어졌다. 대다수 연구논문은 현행의 정부 지원정책과 프로그램을 주어진 것으로 간주하거나 아니면 이전 정책과의 차이점에 따른 변화를 서술하고 정책상의 개선 방향성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연구방식은 정부 지원정책의

2)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 실시하는 통계조사와는 별도로 2011년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는 매년 발간하는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의 소외계층에 북한이탈주민을 포함하고 있다.

개선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다양한 인구·사회학적인 지표의 상승에 대한 정부 지원정책의 성과와 지표 상승에 결정적인 기여를 한 사업과 프로그램에 대한 적절한 평가가 이루어질 경우, 계승하고 지속하는 데 주력해야 할 정책과 좀 더 많은 개선이 필요한 정책의 구분이 쉬울 수 있으며, 더 많은 정책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가설연역법에 근거하여 두 가지 가설을 수립하고 이를 증명하고자 한다. 첫째는, 북한이탈주민의 사회경제적 여건의 변화와 탈북학생의 학업중단율의 감소가 상관관계가 있다는 가설이다. 1장 3절에 언급한 바처럼 학업중단율의 감소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의 상관관계에 관한 선행 연구들이 있으며, 이 연구들에서 논의된 상관관계가 탈북학생에게서도 의미 있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살펴보겠다. 둘째는 탈북학생 교육지원정책의 변화가 학업중단율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가설이다. 선행 연구들에서 정부정책과 학업중단율과의 상관관계를 언급하는 경우는 별로 없다. 이는 정부의 교육정책이 급격한 변화를 보이는 경우가 없으므로 유의미한 결과 도출이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 정부의 탈북학생 교육지원정책은 꾸준하면서도 급격한 변화가 있었고, 학업중단율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

2. 연구목적

한국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은 2009년에 2,914명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규모가 지속적으로 축소되어 2022년에는 67명으로 북한이탈주민의 입국은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반면에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탈북학생[3]들의 수는 크게 변하지 않고 있다.

〈표 2〉 탈북학생 연도별 초중고 재학 현황

연도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학생수	421	474	687	966	1,143	1,417	1,681	1,992	2,022	2,183	2,475	2,517	2,538	2,538	2,531	2,437	2,287	2,061

출처: 교육부(2022).

3) 초·중·고등학교 취학연령에 속하는 북한이탈주민을 지칭하는 용어는 '새터민 청소년', '북한이탈 청소년', '탈북청소년', '탈북학생' 등으로 시기에 따라 변화하였으며, 현재 교육부와 산하 기관에서는 상황에 따라 '탈북청소년' 혹은 '탈북학생'이 사용되고 있다. 본 논문은 초·중·고등학교에 취학 중인 학생을 연구 대상으로 하므로, '탈북학생'을 기본 용어로 사용하고자 한다. 다만 상황에 따라 미취학 청소년을 포함할 때는 '탈북청소년'으로 지칭한다.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는 '탈북학생'을 북한이나 제3국에서 태어나 한국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로 개념 정의하고 있으며, 한국 출생자는 탈북학생의 범주에 포함하지 않는다.

〈표 2〉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북한이탈주민의 입국 추이와는 달리 초중고에 재학 중인 탈북학생의 수는 2017년, 2018년에 2,538명으로 정점에 달하였고, 2022년은 2,061명으로 상대적으로 소폭 감소하였다.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며 북한이탈주민 중에서도 청소년층에 관한 정책지원에 꾸준한 관심이 요구된다.

탈북학생 지원과 관련된 문제는 초기부터 꾸준히 제기되었으나 해결책을 찾기는 난망했다. 이는 주로 하나원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을 중심으로 정책이 시행된 탓에, 탈북학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원정책의 수립과 시행에는 시간이 오래 걸렸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표 3〉 2004년의 탈북학생 취학 현황을 살펴보자. 탈북학생 중에서 중학교 취학연령에 해당하는 114명 중에서 재학생은 66명으로 취학률은 57.9%이며, 고등학교 취학연령에 해당한 294명 중에 취학률은 10.9%에 불과하다. 이는 미취학 탈북청소년이 중학생 연령대에서 42.1%, 고등학생 연령대에서 89.1%에 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교육부에서 2012년 이후 매년 집계하여 발표하고 있는 「탈북학생 통계자료」에 취학률 관련 자료가 없는 것으로 판단할 때, 2012년에 즈음하여 탈북학생 미취학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된 것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2004년에 탈북학생 문제는 매우 심각했다.

〈표 3〉 새터민 아동 청소년 취학현황(2004년 3월) (단위: 명)

구분	중(13-15세)	고(16-20세)
취학대상자	114	294
재학생	66	32
취학률(%)	57.9	10.9

출처: 교육부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학교설립추진계획"(2004.7). (이향규 2006, 199 재인용)

북한이탈청소년의 학업과 관련된 문제의 원인은 〈표 4〉에 나타난 2000~2008년 기간의 중도 탈락 사유에 잘 드러나 있다. 먼저 주목할 점은 2000년 1명이었던 중도 탈락자가 2003년에는 12명으로 증가하더니 이후에는 거의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여 2008년에는 74명으로 정점을 찍었다는 사실이다. 좀 더 입체적인 현황 파악을 위해서는 이 기간의 취학률 변화를 함께 고려해야 하지만, 이와 관련한 통계자료는 찾을 수 없다.

이 기간에 나타난 탈북학생들의 중도 탈락 사유 중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는 것은 '학교 부적응'이다. 기존 연구성과들에 따르면, 부적응의 요인은 대체로 기초 학력 부족으로 인한 학습 능력 부적응, 학업 단절로 인한 연령 차이, 또래와의 문화차이 등으로 파악된다.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학업 중단 사유는 검정고시(혹은 대안학교)이다.

이는 학교에 적응하지 못한 탈북학생들이 학교 밖을 학업의 공간으로 선택하였기 때문이다.

〈표 4〉 2000–2008년 새터민 청소년 중도 탈락 사유별 현황 (단위: 명)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계	비율(%)
학교 부적응	1	3	6	5	7	13	7	16	21	79	43.7
장기 결석				4	2					6	3.3
경제적 사정					3			2	6	11	6.1
검정고시		1	1		1	4	1	8	14	30	16.6
가사				2		2	1	2	4	11	6.1
질병				1					3	4	2.2
비행		1								1	0.6
기타						5	2	6	26	39	21.6
계	1	5	7	12	13	24	11	34	74	181	100

출처: 교육부(2008).

한편, 〈표 5〉에서 나타난 것처럼 2008년~2012년 기간의 중도 탈락 사유는 이 이전 기간과 큰 차이를 보인다. 학교 부적응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20명대를 유지하다가 2011년 8명, 2012년 5명으로 급격히 감소한다. 특이한 점은 2011년과 2012년에 '이민 등 출국'으로 인한 학업 중단이 각각 12명, 24명으로 파악되었다는 사실이다. 이는 제3국에 장기간 체류하다가 한국에 입국한 북한이탈 청소년들이 한국 사회에서의 부적응으로 인해 부모를 따라 다시 체류국으로 돌아갔기 때문이다. 한편 검정고시나 대안학교 등 학교 밖에서의 학업을 선택한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수는 2008년 14명으로 정점을 보인 후 소폭의 감소세를 보인다.

2013년 이후 교육부가 매년 집계하고 있는 탈북학생 통계에서 '중도 탈락 사유별 현황'은 보이지 않고 있다. 이는 2010년 이후 학업중단율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사유별 현황이 통계지표로서의 의미를 상실했기 때문일 것이다.

〈표 5〉 2008–2012년 북한이탈 청소년 중도 탈락 사유별 현황 (단위: 명)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2학년도 비율
학교 부적응	21	20	24	8	5	9%
장기 결석 등				9	13	23%
가정 사정	10	9	9	16		
진로 변경	14	14	6	6	12	21%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2학년도 비율
건강	3	2	3	6		
취업				1		
이민 등 출국	-	-	-	12	24	43%
행방불명	-	-	-	4	2	4%
기타	26	14	14	1		
미기입				4		
계	74	59	42	67	56	100%

출처: 교육과학기술부(2012).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2011년부터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수가 급격히 감소하였는데, 이러한 추세는 탈북학생의 학업중단율(중도 탈락률) 변화에서도 뚜렷이 나타난다. 〈표 6〉에서 보이는 것처럼 2008년 10.8%에 달하는 학업중단율이 2009년에는 6.1%로 감소하였고, 2010년에는 절반 수준 이하인 4.9%로 급격한 감소세를 보인다. 그 이후에는 점진적이고 지속적인 감소세를 유지하다가 2021년과 2022년에는 1.2%와 1.6%로 1%대를 유지하고 있다. 이 기간에 전반적으로 초등학교의 학업중단율이 가장 낮으며, 고등학교의 학업중단율이 가장 높은 추세는 계속 유지된다.

〈표 6〉 탈북학생 중도 탈락률 변화 (단위: %)

구분	초등	중등	고등	계
'08	3.5	12.9	28.1	10.8
'09	1.4	9.0	14.2	6.1
'10	0.9	8.5	9.1	4.9
'11	2.5	4.4	10.1	4.7
'12	2.6	3.8	4.8	3.3
'13	3.1	7.4	1.6	3.5
'14	0.6	3.1	7.5	2.5
'15	0.2	2.9	7.3	2.2
'16	0.6	2.3	6.1	2.1
'17	1.0	1.8	4.3	2.0
'18	0.7	2.9	4.8	2.5
'19	1.4	3.2	4.7	3.0
'20	1.5	2.7	4.8	2.9
'21	0.5	1.2	1.9	1.2

구분	초등	중등	고등	계
’22	0.3	1.8	2.6	1.6
한국 사회 ‘21	0.6	0.5	1.5	

출처: 교육부(2022); 통계청(2022).
※ 학업중단율 산출식 : (해당연도 학업 중단자 총수 /전년 재학생 총수) × 100

〈표 5〉에 나타난 바와 같이 2021년 기준으로 탈북학생의 학업중단율은 한국 초중고에서의 학업중단율에 비해 높다. 초등학교의 경우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지만, 중학교의 경우 각각 1.2%와 0.5%로 탈북 중학생의 학업중단율이 두 배 이상 높고, 고등학교의 경우 각각 1.9%와 1.5%로 0.4%P 높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탈북학생들에 대한 교육지원은 좀 더 개선되어야 할 여지가 있다.

그렇지만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학교 부적응’에 의한 탈북학생 학업 중단 사례는 2011년을 기점으로 급속히 감소하였으며, ‘학업중단율’은 2009년과 2010년에 각각 큰 폭의 감소세를 보이다가 이후 10여 년 동안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특히 학업중단율의 경우 2008년 대비 2022년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막론하고 모두 10배 이상 감소하였다. 이는 한국 정부의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과 탈북학생 교육지원정책이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였음을 의미한다. 본 논문의 목적은 탈북학생 학업중단율의 감소 요인으로 정부 지원정책으로 인한 북한이탈주민의 사회경제적 여건의 향상과 탈북학생 교육지원정책이 ‘학업중단율의 감소’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가정하고, 두 가지 요인을 살펴보는 것에 있다. 이와 관련하여 20010년~2011년 사이에 나타난 ‘학업중단율’과 ‘학교 부적응’의 급격한 변화가 이 두 가지 요인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규명해 보고자 한다.

Ⅱ. 선행 연구 고찰

1999년~2018년 20년간 탈북청소년 관련 학술지 논문 207편을 분석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1999년부터 2009년까지 10년 동안은 매해 10편 이내의 논문이 발표된 것에 비해 2010년 15편으로 연구 편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김보미 외 2019, 1270). 한편, 탈북청소년 관련 논문 중에서 교육을 연구 주제로 하는 논문은 전체 207편 중 51편으로 24.6%를 차지하고 있다(김보미 외 2019, 1274). 특기할 만한 점은 2004년까지 탈북청소년의 교육과 관련된 논문은 전혀 없다가, 2005년과 2006년에 각각 1편과 2편이 발표되었고, 2009년 1편이 발표되고 나서 2010년을 기점으로 연구 편수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이다. 탈북청소년 교육 관련 연구 추세의 변화는 2010년 직전에 이 문제에 관한 관심을 증폭시킨 이슈가 있었음을 의미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학업중단율의 급격한 감소와 시기적으로 일치한다.

〈표 7〉 연도별 탈북청소년 관련 논문 빈도 (단위: 건)

연도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계
탈북청소년 관련	1	0	0	0	3	4	4	5	7	9	4	15	10	12	23	22	24	19	30	15	207
탈북청소년 교육 관련	0	0	0	0	0	0	1	2	0	0	1	3	1	7	5	7	7	7	4	6	51

출처: 김보미 외(2019), 1270, 1277.

한편, 2007년~2017년 11년간 KCI 등재 혹은 등재후보지에 게재된 총 102편의 북한이탈청소년 교육 관련 논문들을 분석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학교 중도 탈락' 관련 논문은 2건에 불과했으며, 교육정책 및 법령과 관련한 연구는 4건으로 3.92%를 차지하는 데 그쳤다(박혜랑 2018, 646).

탈북청소년 관련 연구 동향을 분석한 위의 두 연구 결과[4]에 따르자면 본 논문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탈북학생에 대한 교육정책과 학업중단율과 관련한 선행 연구는 매우 적은 편이다.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면서, 본 장에서는 첫째, 탈북학생 교육지원정책, 둘째, 탈북학생 학업중단율 원인 분석, 셋째,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학업성취도 및 학업중단율과의 상관관계에 대한 기존 연구성과를 정리하고자 한다.

1. 탈북학생 교육지원정책 분석

탈북학생(청소년) 교육지원정책 관련 선행 연구들은 논문 작성 시점의 교육정책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나름의 해결책 혹은 개선 방향을 제시한다.

정진웅(2004)은 탈북청소년 교육 프로그램들이 남한사회로의 성공적 적응과 이에 필요한 학력 증진 교육에 최우선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탈북청소년 대부분은 경쟁적인 남한사회에서 주변화되어 좌절하고 방황한다고 지적한다. 문제점 극복을 위해서는 자신의 정체성과 문화를 형성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적 실천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4) 두 연구성과에서 파악한 탈북청소년 교육 관련 논문의 수는 각각 51건, 102건으로 약 두 배 정도의 차이가 있다. 두 연구는 모두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를 사용하였으나, 검색에 사용한 주제어가 서로 다른 관계로 검색 결과에 차이가 나타났다.

정병호(2005)는 탈북청소년들이 성장 발육상의 문제, 심리 · 정서적 상처, 남북 간 교육 내용 차이, 학력 문제 등의 복합적 문제를 안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성을 지닌 기관으로 '새터민(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지원할 것을 주장한다.

장문강(2008)은 2001년 2월까지는 북한이탈청소년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부재하였으며, 대안학교 '하나둘학교'가 설립되기는 하였으나 교사 수급의 어려움, 실력 차이에 따른 개별 수업의 불가, 통일부라는 정부 조직이 갖는 교육적 마인드의 부족, 3개월이라는 교육 기간 등은 새터민 청소년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에는 미약하였음을 지적한다.

문희정(2012)은 다문화적 기준을 적용하여 교육목표와 체계, 심리 · 진로상담, 학습결손 지원, 교육과정과 교재 개발, 연수, 학부모 참여 등의 정책 방향성을 제안한다.

김현정 · 박선화(2017)는 소수집단 지원정책에 관한 이론을 토대로 5단계의 교육 지원정책을 제시하면서, 각종 교육 지원프로그램은 각 단계에 조응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하며, 단계별 정책은 '동화'로부터 '다문화주의'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정책 방향성과 합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지수 등(2018)은 정부 주도적 교육정책의 한계, 스스로 변화하고 실천할 수 있는 토대역량 교육 부족, 지속적인 결핍의 보완책 마련이라는 정책 지향성 등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탈북청소년이 스스로 욕구를 파악하고 선택할 힘과 토대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새로운 교육모델이 개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은혜(2019)는 1997년에서 2017년까지의 탈북청소년 교육지원정책을 분석하면서 이 기간의 교육지원 정책변화의 특징을 '특수성 중심에서 보편성 강조', '탈북청소년 집단 내 다양성 인정', '역량 강화'로 정리하고, 정책변화에 따른 성과가 있지만 보상적 차원에 머물러 있는 세부 프로그램들은 개선의 필요가 있음을 지적한다.

2. 탈북학생 학업중단율에 미치는 원인 분석

탈북학생 학업중단율의 원인으로는 학업 부적응, 연령 차이가 거론되고 있으며, 이외에도 연구자에 따라 다양한 원인이 제시되고 있다.

이항규(2006)는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취학률이 매우 낮으며 그 이유로 높은 중도 탈락률을 제시한다. 또한 높은 수준의 중도 탈락률의 원인으로는 식량난 장기화로 인한 북한 공교육의 비정상적 작동, 장기간의 난민 생활, 남북한 교육제도의 차이 등을 들고 있다.

이수연(2006)은 2007년 중도 탈락률이 11%로 높은 수준임을 지적하면서, 그 원인으

로 수업 활동과 교과 내용의 불충분한 이해로 인한 학업적응 문제, 교우들과의 연령 격차와 편견, 교사들의 관심과 배려 부족, 진학 및 취업 문제, 또래문화 부적응 등을 들고 있다.

김영하(2010)는 1999~2008년 동안의 새터민 청소년 학업 중도 탈락 원인을 분석한 결과 학교생활 부적응의 이유로 학업적응 문제, 연령차이와 또래와의 문화차이, 교사와의 관계, 진학 및 취업 문제 등을 들고 있다. 부적응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교육지원 체계 개선 통한 적응력 개선, 다수자 집단 청소년 대상 다문화 교육 시행 등을 제안한다.

양영은 등(2010)은 학업을 중단한 북한이탈청소년의 부적응 요인으로 학업 격차와 연령차로 인한 정규교육체계 편입의 어려움, 학력 조건 미달로 인한 이직과 무직 경험의 반복, 새로운 환경에서 오는 스트레스, 자신감 부족, 대인기피, 소외감 등을 제시한다.

3.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학업성취도 및 학업중단율과의 상관관계

청소년의 학업성취도와 학업중단율과 관련한 대다수 연구는 가족의 경제적 수준을 주요한 원인으로 제시한다. 박창남 등(2005)은 소득집단별로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데, 상위소득 집단에서는 부의 교육 수준만이 성적에 영향을 미치고, 중위소득 집단에서는 부의 교육 수준과 소득이, 하위 소득집단에서는 부의 교육 수준, 사교육비, 모의 취업 여부, 소득이 각각 영향을 미친다. 홍성효 등(2022)의 연구 결과 역시 전반적으로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학업 중단 경험의 가능성이 높다.

경제적 수준과 함께 다른 요인들을 제기하는 연구도 있다. 원지영(2009)에 따르면 부모의 인적 · 경제적 자본이 풍부한 가정에서 성장하는 청소년들이 더 높은 학업성취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다. 김범구(2012)는 학업 중단에 영향을 미치는 가정 요인의 위험 요인으로 낮은 가정의 경제적 수준, 가정 내 갈등, 낮은 부모의 자율성 지지 등을 변인으로 제시한다.

Ⅲ. 북한이탈주민의 한국에서의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

본 장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이 한국에 정착한 이후 사회경제적인 여건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시계열적으로 분석하고, 이러한 변화가 탈북학생의 학업중단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 탈북학생 학업중단율 관련 통계가 2008년 이후로 제시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북한이탈주민의 사회경제 통계 역시 2008년부터 제시되어야 하지만, 사용할 수 있는 공식 통계의 상당수는 2016년 이후로 한정된다. 공식적으로 북한이탈주민의 사회경제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것은 2010년 3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제30조에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실태조사 및 통계구축사업' 조항이 명시된 이후이다. 이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 2011년 「북한이탈주민 경제활동 실태」를 발간하였고, 2012년부터 「북한이탈주민 (정착) 실태조사」와 「북한이탈주민 사회(통합)조사」가 이루어졌다. 다른 한편, 실시하는 조사항목과 지표가 매년 변화하였는데, 2016년에 항목과 지표의 표준화가 이루어지면서 시계열 비교가 가능한 조사보고서가 발간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본 논문에서는 주로 2016년 이후 7년간의 통계자료를 통해 시계열적인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1. 삶의 만족도

본 절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주관적인 삶의 만족도를 먼저 살펴보고자 한다. 북한이탈주민에 관한 연구들은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써 자기효능감, 성별, 교육수준, 경제 수준, 직장 유무, 탈북 동기, 정신건강, 한국에서의 거주기간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사회통합의 중요한 요인으로 간주한다(김미령 2007; 장민수 외 2016; 김안나 외 2023). 즉, 삶의 만족도는 북한이탈주민이 한국 사회에 얼마나 잘 적응하고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종합지표라 할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제도의 문제점과 그로 인한 생계의 어려움, 사회 부적응, 차별 등에 대해서는 기존의 많은 연구에서 지적되고 있다. 그리고 북한이탈주민의 경제 수준과 한국 전반의 경제 수준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런데도 2012년 이후 실태조사가 시작된 북한이탈주민의 '삶의 만족도' 수준은 매우 높다. '매우 만족'과 '만족'을 합한 비율은 2012년 67.4%에서 꾸준히 상승하여 10년 후인 2022년에는 10%P 증가한 77.4%를 기록하였다.

이러한 비율은 한국 사회를 대상으로 조사한 만족도 비율보다 매우 높은 수준이다. 이를테면 2014년에는 북한이탈주민의 만족도 비율이 67.6%로 한국 사회의 50.7%에 비해 16.9%P 높게 나타났다. 두 집단의 격차는 2022년 2.0%P로 줄어들긴 했지만, 북한이탈주민 삶의 만족도가 여전히 높다. 주의할 점은 북한이탈주민 대상 삶의 만족도 조사는 5점 척도로 진행됐지만, 한국 사회의 경우는 10점 척도라는 사실이다. 『한국의 사회지표』

조사에서는 6점 이상을 '만족'의 기준으로 삼았으며, 이를 똑같이 적용한다면 북한이탈주민의 '만족'의 기준은 3점 즉 '보통' 이상으로 해야 동일한 척도가 될 수 있다. 이 경우 〈표 8〉에서 알 수 있듯이 북한이탈주민 삶의 만족도 비율은 2012년 95.7%에서 꾸준히 상승하여 2022년에는 97.6%에 이르게 된다. 한편 2022년은 '불만족하는 편'의 비율은 1.4%, '매우 불만족'의 비율은 1.0%로 나타났다.

〈표 8〉 북한이탈주민 및 한국 사회 삶의 만족도 (단위: %)

연도	북한이탈주민					한국 사회
	매우 만족(1)	만족(2)	보통(3)	(1)+(2)	(1)+(2)+(3)	만족
2012	27.3	40.1	28.3	67.4	95.7	-
2014	17.7	49.9	28.6	67.6	96.2	50.7
2016	23.7	43.3	29.2	67.0	96.2	57.2
2017	23.4	50.2	22.7	73.6	96.3	60.2
2018	23.1	49.4	23.7	72.5	96.2	63.7
2019	25.4	48.8	23.5	74.2	97.7	60.7
2020	28.3	48.1	21.6	76.4	98.0	61.6
2021	26	50.5	20.9	76.5	97.4	72.4
2022	27.9	49.5	20.2	77.4	97.6	75.4

출처: 남북하나재단(2012, 2014,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통계청(2022).

북한이탈주민이 남한 생활에 만족하는 이유로 꼽은 제일 큰 이유는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어서'로 지난 6년간 29.0%~33.4%의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이 순위는 변하지 않고 있다. 두 번째의 만족 이유는 '내가 일한 만큼 소득을 얻을 수 있어서'이며,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대체로 25% 내외이다. 주의할 점은 '내가 일한 만큼 소득을 얻을 수 있어서'와 '북한보다 경제적 여유가 있어서'라는 항목은 모두 경제적인 여건과 관련 있으며, 두 항목을 합한 비율은 대체로 45%~49%를 보인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이 남한 생활에 만족하는 주된 요인은 경제적인 동기를 띠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9〉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생활에 만족하는 이유 (단위: %)

연도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어서	내가 일한 만큼 소득을 얻을 수 있어서	북한보다 경제적 여유가 있어서	자녀에게 더 좋은 미래를 줄 수 있어서	가족과 함께 생활할 수 있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어서(자아실현)	주변 사람들의 인정을 받아서	기타
2017	29.3	25.8	22.2	8.2	6.7	6.6	0.4	0.8
2018	33.0	23.7	21.5	7.4	6.1	6.7	0.6	1.1
2019	30.5	25.2	21.9	6.0	7.5	7.3	0.5	1.0
2020	29.0	26.2	23.1	6.3	8.0	5.6	0.4	1.3
2021	30.8	24.8	22.7	7.1	7.7	5.0	0.3	1.5
2022	33.4	23.9	22.5	7.6	6.5	4.9	0.3	0.7

출처: 남북하나재단(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 설문조사에서는 1순위와 2순위를 선택하도록 문항이 작성되었으며, 본 논문에서는 1순위만 표에 사용함

북한이탈주민이 남한 생활에 만족하는 이유는 이들의 탈북 이유와 긴밀한 연관관계를 보인다. 탈북 이유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점하는 것은 '북한 체제의 감시 · 통제가 싫어서(자유를 찾아서)'로 지난 6년간 20%~25%를 기록하고 있다. 이 비율은 남한 생활 만족도에서 제일 높은 비율을 보이는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어서'의 비율인 29.0%~33.4%보다는 좀 더 낮은 수치이다. 한편, '식량이 부족해서', '가족에게 더 나은 생활환경을 주려고', '돈을 더 벌고 싶어서' 등 경제적인 동기로 해석할 수 있는 문항에 대한 응답 비율은 43%~46%로 나타났으며, 이는 삶의 만족도에서 경제적인 여건과 관련된 항목들에서 보이는 비율과 상당히 유사하다.

〈표 10〉 북한이탈주민의 탈북 이유 (단위: %)

연도	북한 체제의 감시·통제가 싫어서(자유를 찾아서)	식량이 부족해서	가족(자녀 등)에게 더 나은 생활환경을 주려고	먼저 탈북한 가족을 찾거나 함께 살기 위해	돈을 더 많이 벌고 싶어서	북한에 함께 있던 가족을 따라서	신변의 위협을 느껴서	먼저 탈북한 사람(가족 제외)이 권유해서	주변 사람(가족 제외)의 권유로
2017	23.6	22.9	12.4	9.7	10.2	7.3	6.5	3.2	2.1
2018	25.3	22.5	12.5	9.4	9.6	7.3	5.8	4.1	1.9
2019	21.5	23.5	11.1	10.1	9.9	7.8	6.8	4.2	2.8
2020	20.5	22.8	13.1	10.0	9.8	7.8	5.5	4.9	2.9
2021	22.8	21.6	10.7	10.4	10.7	7.8	5.7	4.8	3.2
2022	22.6	21.4	12.9	9.6	9.4	8.0	6.2	5.1	2.8

출처: 남북하나재단(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 설문조사에서는 1순위와 2순위를 선택하도록 문항이 작성되었으며, 본 논문에서는 1순위만 표에 사용함

2. 북한이탈주민의 사회경제적 지위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학업중단율과 학업성취도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를테면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학업 중단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으며(홍성효 외 2022, 47), 가정의 낮은 경제적 수준, 가정 내 갈등, 낮은 부모의 지지 등이 학업 중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김범구 2012, 324). 또한 경제적으로 중위와 하위집단에서는 아버지의 교육 수준과 소득, 어머니의 취업 여부 및 소득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박창남 외 2005, 298).

본 절에서는 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학업중단율 및 학업성취도와 상관관계가 있다는 기존의 연구성과를 토대로 북한이탈주민의 '사회경제적 지위', '경제활동 현황', '가구 소비', '가구소득' 등의 지표가 어떠한 시계열적 변화를 보이는 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1) 연도별 사회경제적 지위의 변화

2017년에서 2022년 기간 동안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조사한 '사회경제적 지위'는 점진적이지만 꾸준히 향상되고 있다. 이 기간에 '최상층'의 변화는 그리 크지 않으며 '상층'은 약간의 증가세가 보인다. 가장 큰 증가 폭을 보인 계층은 '중상층'으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인 2018년의 16.0%에 비해 2022년에는 16.8%P 증가한 22.8%로 나타났다. '중산층 이상'을 합산하면 2018년 18.1%에서 2022년에는 25.5%로 그 비율이 많이 증가한다. 전반적으로 북한이탈주민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사회경제적 지위는 해마다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그러나 상층 전반의 꾸준한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중하층', '하층', '최하층' 등 하층 전체의 비율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도 주목해야 한다. 2018년 중하층 이하의 비율은 81.9%로 가장 높았고, 2022년에는 74.5%로 7.4%P 감소하였으나, 상층 전체 대비 하층 전체가 차지하는 비율은 압도적으로 높다.

〈표 11〉 북한이탈주민 연도별 사회경제적 지위 (단위: %)

연도	최상층	상층	중상층	중하층	하층	최하층	중상층 이상	중하층 이하
2017	0.7	1.7	16.9	34.3	36.3	10.1	19.3	80.7
2018	0.5	1.6	16.0	36.0	36.8	9.1	18.1	81.9
2019	0.3	1.8	16.7	36.1	35.1	10.0	18.8	81.2
2020	0.7	2.0	17.8	35.2	35.7	8.5	20.5	79.4
2021	0.6	1.5	19.8	34.0	34.5	9.6	21.9	78.1
2022	0.6	2.1	22.8	31.5	35.2	7.8	25.5	74.5

출처: 남북하나재단(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북한이탈주민과 한국 사회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대한 주관적 평가를 비교하면 약간은 다른 결과에 도달한다. 통계청이 발간하는 『한국의 사회지표』의 '계층귀속감' 항목에서는 상상 · 상하를 상층, 중상 · 중하를 중층, 하상 · 하하를 하층으로 분류하고 '상층', '중층', '하층'으로 구분한다. 똑같은 기준으로 북한이탈주민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분류하면 〈표 12〉를 얻게 된다. 이 경우 두 집단의 '상층' 비율은 때에 따라 비슷한 수준을 보인다. 한편, 2017년과 2021년을 비교하면 북한이탈주민의 '중층'은 51.2%에서 53.8%로 2.6%P, 5.1%의 증가율을 보이며, 한국 사회의 '중층'은 57.6%에서 58.8%로 1.2%P, 0.21% 증가한다. 즉 한국 사회 전체에 비해 북한이탈주민의 사회경제적 지위의 향상이 더 빠르다. '하층'의 경우도 비슷한 수준의 감소율을 보인다. 5년이라는 짧은 기간의 통계수치 변화를 통해서 단정적으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북한이탈주민과 한국 사회 전체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대한 주관적 평가는 점진적으로 수렴되는 추세를 보인다.

〈표 12〉 북한이탈주민 및 한국 사회 연도별 사회경제적 지위 (단위: %)

연도	북한이탈주민			한국 사회		
	상층	중층	하층	상층	중층	하층
2017	2.4	51.2	46.4	2.7	57.6	39.7
2018	2.1	52.0	45.9	-	-	-
2019	2.1	52.8	45.1	2.4	58.5	39.1
2020	2.7	53.0	44.2	-	-	-
2021	2.1	53.8	44.1	2.7	58.8	38.5
2022	2.1	54.3	43.0	-	-	-

출처: 남북하나재단(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통계청(2022).

북한이탈주민이 느끼는 한국에서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한국 거주기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최상층과 상층의 경우 거주기간에 따른 비율의 차이가 통계적인 의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그 차이가 미미하다. 그러나 중상층과 중하층의 경우는 거주기간에 따른 비율의 격차가 현격히 드러난다. 2017년 '중상층'의 경우, '3년 미만'과 '10년 이상'의 비율은 각각 14.0%와 17.6%로 3.6%P 차이를 보인다. 2022년은 그 비율이 각각 11.8%와 25.9%로 14.1%P로 격차가 훨씬 크다. 한편, '중하층'의 경우 2022년 '3년 미만'과 '10년 이상'의 비율이 각각 24.8%와 33.5%로 8.7%P 차이가 나며 이러한 양상은 조사가 실시된 모든 연도에서 같다.

〈표 13〉 북한이탈주민 거주기간별 사회경제적 지위 (단위: %)

연도	구분	최상층	상층	중상층	중하층	중상층 이상	중층 이상
2017	3년 미만	1.1	1.8	14.0	26.6	16.9	43.5
	3~5년	0.2	2.1	14.7	31.8	17.0	48.8
	5~10년	0.6	1.4	17.6	35.4	19.6	55.0
	10년 이상	1.0	1.9	17.6	36.7	20.5	57.2
2018	3년 미만	1.0	2.5	11.8	30.9	15.3	46.2
	3~5년	0.1	1.8	12.7	31.8	14.6	46.4
	5~10년	0.4	1.5	16.4	35.0	18.3	53.3
	10년 이상	0.7	1.4	17.7	40.2	19.8	60.0
2019	3년 미만	0.7	1.9	12.4	31.6	15.0	46.6
	3~5년	0.7	1.5	12.0	35.7	14.2	49.9
	5~10년	0.1	1.7	18.3	36.7	20.1	56.8
	10년 이상	0.4	1.8	17.5	37.1	19.7	56.8
2020	3년 미만	0.7	2.4	11.8	25.8	14.9	40.7
	3~5년	0.8	0.9	16.2	31.9	17.9	49.8
	5~10년	0.6	1.6	17.1	38.4	19.3	57.7
	10년 이상	0.8	2.5	20.5	35.6	23.8	59.4
2021	3년 미만	0.9	1.8	10.5	29.9	13.2	43.1
	3~5년	0.8	1.9	13.4	37.2	16.1	53.3
	5~10년	0.5	1.5	20.0	31.6	22.0	53.6
	10년 이상	0.6	1.4	21.9	35.6	23.9	59.5
2022	3년 미만	0.6	1.6	11.8	24.8	14.0	38.8
	3~5년	0.2	2.3	14.9	28.0	17.4	45.4
	5~10년	1.0	1.8	19.7	29.2	22.5	51.7
	10년 이상	0.5	2.3	25.9	33.5	28.7	62.2

출처: 남북하나재단(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앞의 〈표 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북한이탈주민의 한국 입국자 수는 2009년 2,252명을 정점으로 점차 감소하다가 2020년부터는 매년 229명, 63명, 67명으로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다. 논리적으로 판단할 때 북한이탈주민의 평균적인 한국 거주기간은 매년 증가할 수밖에 없다. 〈표 14〉에서 '3년 미만' 거주자의 비율은 2017년 12.4%에서 2022년 4.1%로 3배 이상 감소하였고, '10년 미만' 거주자의 비율은 28.8%에서 60.2%로 2배 이상 증가한다.

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사회경제적인 다양한 지표들이 개선될 것이며 한국 사회의 평균에 근접하리라는 것을 의미한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거주기간이 길수록 '사회경제적 지위'에 대한 주관적 평가는 더욱더 긍정적이다. 이를테면, 2021년 한국 사회의 '중층 이상' 비율은 61.5%이고, 10년 이상 거주 북한이탈주민의 '중층 이상' 비율은 59.5%이다. 2022년에는 이 비율이 62.2%로 한국 사회의 2021년 통계치를 0.7%P 능가한다.

〈표 14〉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거주기간 (단위: %)

구분	3년 미만	3~5년	5~10년	10년 이상	5년 이상 합계
'17	12.4	10.6	48.2	28.8	77.0
'18	9.9	9.7	47.2	33.2	80.4
'19	13.2	8.1	43.7	35.0	78.7
'20	12.1	7.3	37.5	43.1	80.6
'21	8.2	7.8	29.9	54.1	84.0
'22	4.1	7.3	28.3	60.2	88.5

출처: 남북하나재단(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 연도별 경제활동 현황과 가구소득

탈북학생의 학업성취도와 학업중단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 부모의 직업 유무, 소득수준 등이 거론되고 있으며 여기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인 여건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북한이탈주민의 경제활동 관련 지표는 매년 꾸준히 향상되고 있다.[5] 2008년 49.6%에 머물러 있던 경제활동 참가율은 2017년 60%대를 넘어섰고 2022년에는 63%를 기록하면서 2008년 대비 12.4%P 증가했다. 한국 사회의 경우 2008년~2022년 동안 61.7%에서 63.9%로 2.2%P 증가했다. 북한이탈주민의 경제활동 참가율의 증가세가 훨씬 가파르며, 2022년 기준으로는 거의 같은 수준에 다다랐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고용률 역시 가파른 증가세를 보인다. 2008년 44.9%에서 2022년에는 59.2%로 14.3%P 증가했다. 그러나 2022년 한국 사회 고용률 62.1%와의 격차는 1.9%P로 경제활동 참가율에 비해 큰 편이다. 이 격차는 북한이탈주민 중 근로의 의사는 있으나

5) 경제활동 관련 지표의 해석에 있어 주의할 점은 북한이탈주민과 한국 사회 전체의 인구·사회학적 분포가 다르다는 사실이다. 〈표 1〉에서 알 수 있듯이, 북한이탈주민의 성별 구성은 여성의 비율이 남성보다 2.6배 정도 더 많다. 또한 20~30대 젊은 층의 비율도 다른 연령대보다 높은 편이다.

취업하지 못한 인구가 한국 사회 전체에 비해 더 많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현상은 실업률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실업률은 9.5%에서 2022년 6.1%로 감소했지만, 2022년의 한국 사회 실업률 2.9%에 비해 3배 더 높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북한이탈주민의 경제활동과 관련하여 정부의 지원정책은 지속되어야 한다. 그렇지만 경제활동 현황과 관련된 지표가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인다는 점은 북한이탈주민이 한국 사회에 대체로 잘 적응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표 15〉 북한이탈주민 및 한국 사회 경제활동 현황표

구분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북한이탈주민	경제활동 참가율	49.6	48.6	42.6	56.5	54.1	56.9	55.3	59.4	57.9	61.2	64.8	62.1	60.1	61.3	63.0
	고용률	44.9	41.9	38.7	49.7	50.0	51.4	51.7	54.6	55	56.9	60.4	58.2	54.4	56.7	59.2
	실업률	9.5	13.7	9.2	12.1	7.5	9.7	6.4	4.8	5.1	7.0	6.9	6.3	9.4	7.5	6.1
한국 사회	경제활동 참가율	61.7	61.0	61.1	61.3	61.6	61.7	62.7	62.8	62.9	63.2	63.1	63.3	62.5	62.8	63.9
	고용률	59.8	58.8	58.9	59.3	59.6	59.8	60.5	60.5	60.6	60.8	60.7	60.9	60.1	60.5	62.1
	실업률	3.2	3.6	3.7	3.4	3.2	3.1	3.5	3.6	3.7	3.7	3.8	3.8	4.0	3.7	2.9

출처: 통일부(2022)에서 재인용; 통계청(2022).

북한이탈주민의 연평균 가구소득[6] 역시 다른 경제 지표와 마찬가지로 지속적이고 가파른 상승세를 보인다. 2017년 2,685.4만 원이었던 연평균 가구소득은 2021년에는 3,325만 원으로 23.8% 증가했다. 이 수치는 같은 기간 한국 사회의 가구소득(경상소득 기준) 증가율 12.4%의 거의 두 배에 해당한다. 즉 북한이탈주민의 가구소득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한국 사회의 가구소득을 빠르게 따라잡고 있다. 그렇지만 두 집단 간 가구소득의 차이는 거의 두 배에 가깝다는 점은 유념해야 한다.

〈표 16〉 북한이탈주민 및 한국 사회 연평균 가구소득 (단위: 만 원)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북한이탈주민	2,685.4	2,834.6	3,080.6	3,017.2	3,325.0
한국 사회 (경상소득)	5,705	5,828	5,924	6,125	6,414
한국 사회 (처분가능소득)	4,671	4,729	4,818	5,003	5,229

출처: 남북하나재단(2017, 2018, 2019, 2020, 2021); 통계청(2022).

6) 북한이탈주민의 가구소득에 대한 지표 정의서가 없으므로, 경상소득인지 처분가능소득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앞의 〈표 13〉에서 북한이탈주민의 한국 거주기간이 증가할수록 사회경제적 지위에 대한 주관적 판단은 더 긍정적이었다. 이러한 양상은 연평균 가구소득에서도 똑같이 나타난다. 이를테면 2017년에는 3년 미만 거주자 중에서 4.4%만이 5천만 원 이상의 가구소득을 보였지만, 10년 이상 거주자 중 동일한 소득을 보인 비율은 17.7%로 무려 네 배에 달한다.

〈표 17〉 북한이탈주민 연평균 가구소득 거주기간별 비율 (단위: %)

연도	구분	1,000만 원 미만	1,000~2,000 만 원	2,000~3,000 만 원	3,000~4,000 만 원	4,000~5,000 만 원	5,000만 원 이상	평균 (만원)
2017	3년 미만	33.9	28.9	19.7	9.2	3.8	4.4	1,819.6
	3~5년	17.4	31.4	15.6	16.9	10.5	7.8	2,465.8
	5~10년	17.9	23.0	18.2	17.6	9.7	13.3	2,729.7
	10년 이상	18.5	21.2	15.7	13.6	12.8	17.7	3,065.2
2018	3년 미만	27.0	30.0	20.3	9.1	7.1	6.3	2,033.9
	3~5년	16.1	31.1	17.4	13.6	11.2	10.2	2,553.4
	5~10년	15.2	22.8	18.6	15.8	11.3	15.6	2,897.0
	10년 이상	17.4	19.2	17.9	16.0	10.8	17.8	3,067.4
2019	3년 미만	30.8	26.3	17.6	9.4	5.4	7.5	2,010.6
	3~5년	15.7	25.1	20.7	15.4	9.2	11.8	2,621.2
	5~10년	14.3	18.9	15.9	17.2	12.5	19.0	3,323.5
	10년 이상	14.9	18.5	14.1	19.0	12.5	20.5	3,281.9
2020	3년 미만	28.5	29.9	17.8	9.2	5.4	7.8	2,065.2
	3~5년	15.6	22.8	24.3	10.1	8.8	18.2	2,800.4
	5~10년	15.5	20.3	19.2	13.7	9.5	20.7	3,104.3
	10년 이상	17.8	17.9	13.6	15.5	11.1	22.3	3,247.6
2021	3년 미만	31.2	31.6	17.8	9.9	2.3	6.3	1,877.5
	3~5년	14.8	25.6	22.7	14.3	8.0	13.0	2,843.0
	5~10년	14.8	20.3	18.4	14.3	9.3	20.4	3,253.2
	10년 이상	16.0	17.2	17.4	12.9	9.9	24.0	3,656.4

출처: 남북하나재단(2017, 2018, 2019, 2020, 2021).

3. 소결

본 논문의 서두에서 제기했던 탈북학생의 학업중단율의 감소에 북한이탈주민의 사회경제적 지위의 변화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정은 타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선행 연구를 고찰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가정의 경제 수준, 부모의 소득과 취업 여부는 학업중단율과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들에 포함되며, 이와 관련한 지표들은 매년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여러 지표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는 것은 '삶의 만족도'이며, 한국 사회 구성원들이 느끼는 만족도에 비해 월등히 높다. 북한이탈주민 높은 수준의 만족도는 탈북 이유에서 잘 드러난다. 왜냐하면 이들의 만족도는 한국에서의 삶과 북한에서의 삶과의 비교, 즉 정치 · 사회적 자유의 정도, 소득수준, 경제적 여유 등에 대한 비교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둘째, 사회경제적 지위, 가구소득, 경제활동 참가율, 고용률 등의 지표를 북한이탈주민과 한국 사회 전반과 비교했을 때, 북한이탈주민 지표들의 상승률이 압도적으로 높다. 이러한 추세가 의미하는 바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북한이탈주민들의 사회경제적 여건이 한국 사회 평균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 북한이탈주민의 사회경제적 여건은 한국에서의 거주기간이 길수록 훨씬 더 그 수준이 높다. 〈표 14〉의 추세를 고려하면 향후 5년 정도 후에는 10년 이상 거주한 이들의 비율은 90%를 상회할 것으로 보이며, 한국으로의 입국자 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사회경제적 여건의 상승세는 지금보다 더 높을 수 있다.

넷째, 북한이탈주민의 사회경제적 여건의 지속적 향상에도 불구하고 실업률, 가구소득 등의 지표는 한국 사회 전반과 비교했을 때 낮은 수준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기조는 유지되어야 한다.

탈북학생 학업중단율의 감소와 북한이탈주민 사회경제적 여건의 변화가 서로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는 점은 타당하지만, 한 가지 문제는 남는다. 즉, 사회경제적 여건의 변화는 2009년과 2010년에 발생한 탈북학생 학업중단율의 급격한 감소를 설명하지 못한다. 이는 가용한 통계자료가 대체로 2016년 이후의 것으로 시기적으로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탈북학생의 학업중단율에서 보이는 급격한 변화가 사회경제적 여건에서 발생할 가능성은 희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급격한 변화와 관련된 내용은 다음 장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Ⅳ. 탈북학생 교육지원정책의 변화

본 장에서는 공식적인 탈북학생 교육지원정책의 변화를 살펴보고, 탈북학생의 학업중단율의 감소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정책 요인을 찾고자 한다. 1997년 이후의 탈북학생 교육지원정책은 크게 두 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 시기는 '적응 · 정착 중심 교육지원정책 시기'이다. 이 시기에는 정책의 구상과 시행의 주체가 통일부이다. 이에 따라 정책의 핵심은 북한이탈주민의 한국 사회에의 적응과 정책에 맞춰지며, 탈북학생 교육지원정책은 적응과 정착이라는 핵심 정책에 종속되는 경향을 보인다. 이 시기에 교육부의 탈북학생 교육지원정책은 전혀 없거나, 있더라도 보조적인 역할로 국한된다.

두 번째 시기는 '탈북학생 교육지원정책 수립 · 확장기'로 2008년 이후이다. 이 시기 정책 수립 · 시행의 주체는 교육부이다. 이에 따라 하나원 혹은 하나둘학교, 한겨레중고등학교라는 한정된 공간을 넘어서 탈북학생교육 전반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지향성이 변모한다. 2017년 이후에는 '제3국 출생 자녀', '무연고청소년' 등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탈북청소년들로 정책의 대상을 확장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표 18〉 탈북학생 주요 교육지원정책

시기 구분	연도	주요 내용
적응·정착 중심 교육지원정책 시기	1997	· 북한이탈주민지원법 제정 · 북한 또는 외국에서 이수한 학교교육과정 학력 인정 조항 · 통일원 장관은 교육에 필요한 지원 할 수 있음
	1999	· 하나원 준공·개소
	2001	· 남북문화통합교육원, 대안학교 '하나둘학교' 설립
	2006	· 한겨레중고등학교 개교
탈북학생 교육지원정책 수립·확장기	2008	· 탈북자 학력 심의「초·중등 교육법 시행령」제96~98조 개정 ·「새터민 청소년 교육지원계획」수립 ·「북한이탈청소년 교육 지원 대책」수립
	2009	· 탈북청소년 교육지원센터 설립 · 교육부, 탈북학생교육 예산 전년 대비 4배 증액
	2017	· 예비학교 입소 대상에 제3국 출생 자녀 포함하는 조항 신설
	2021	· 24세 이하 무연고청소년 보호 조항 신설

1. 적응 · 정착 중심의 교육지원정책 시기: 1997년~2007년

1) 북한이탈주민지원법 제정

북한이탈주민의 교육지원에 대한 정책이 공식적으로 시작된 시점은 1997년 「북한이탈주민지원법」의 제정이다. 1993년 전면 개정 · 시행된 「귀순북한동포보호법」 제9조에 귀순북한동포에 대해서 교육보호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기는 하지만, 법률의 적용 대상이 탈북학생이라기보다는 군사 분계선을 넘어서 귀순한 북한 주민, 특히 북한 군인을 염두에 둔 것으로 파악된다. 무엇보다 이 법률을 주관하는 부처가 통일부가 아닌 국방부이고, 귀순자에 대한 보조금과 보로금 지급, 한국군으로의 임용 등에 관한 내용이 핵심이기 때문이다.

1997년부터 현재까지 북한이탈주민지원법의 주관 부처는 통일부이며, 법 제정 이후 십여 년간은 사실상 통일부가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의 핵심 부처로 역할 했다. 탈북학생 교육지원정책의 실질적 주체가 되어야 하는 교육부가 법률에 언급된 것은 2010년 3월 북한이탈주민지원법 제24조 2항에 북한이탈주민 예비학교의 설립 조항이 신설되면서부터이다.

한편, 1997년의 법 조항 중에 북한이탈주민의 학교 교육과 관련된 내용은 학력 인정에 대한 제13조 "보호대상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북한 또는 외국에서 이수한 학교교육의 과정에 상응하는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라는 규정과 교육지원과 관련하여 제24조 "통일원 장관은 보호 대상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의 연령 · 수학능력 기타 교육여건 등을 고려하여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다. 이 두 가지 조항은 북한이탈주민이 정상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기반으로 작용하지만, 탈북청소년에 대한 교육지원정책이 시작된 시점은 2001년 '하나둘학교'가 설립된 이후이다.

2) 하나원 개소

1997년의 북한이탈주민지원법 제10조에는 "통일원장관은 보호대상자에 대한 보호 및 정착지원을 위하여 정착지원시설을 설치 · 운영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법적 근거로 하여 1997년 하나원 시설 건립을 시작하여 1999년 7월에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을 준공 · 개소하였다(통일부 2003, 4장 3절).

하나원에서는 2개월(후에는 3개월) 동안의 교육과정을 통해 이들이 우리 사회에 적응하여 생활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소양을 갖출 수 있도록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실시한다. 교육 중점은 일차적으로 탈북 및 제3국에서의 은신 · 도피 생활 과정에서 겪은

심리적 불안과 자유민주주의 사회로의 새로운 환경변화에 따른 정서적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심리안정 · 정서 순화에 두고 있다. 또한 자유민주주의 · 자본주의 사회에 대한 이해 부족, 언어 · 사고 · 생활 습관 등의 차이로 인한 문화적 이질감 해소에 역점을 두는 한편,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현장 체험 교육과 사회 편입 후 원활한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진로 지도 프로그램을 시행한다(통일부 2003, 4장 3절).

하나원은 한국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의 적응 · 정착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고, 정착 초기 단계에서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한편 하나원 초기에는 탈북학생 교육지원과 관련하여 아동의 교육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하나원 인근 삼죽초등학교 및 병설위치원에서 아동들이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경험할 기회를 제공하였지만, 탈북청소년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은 부재하였다.

3) 하나둘학교 설립

'하나둘학교'는 2001년 2월 민간 단체인 '남북문화통합교육원'이 20세 미만의 탈북청소년 교육을 위하여 설립하였으며, 탈북청소년들의 정서 · 심리적 안정과 남한 문화에 대한 소개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일종의 대안교육 현장이라 할 수 있다. 하나둘학교는 유치반, 초등반, 청소년반으로 구성된다. 유치반은 7세까지의 유아들, 초등반은 8세~15세까지, 청소년반은 15~20세 전후이다(윤상석 2009, 36-37). 반별 교육내용을 보면, '유치반'은 일종의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역할을 하며, 공동체 놀이, 놀이치료, 구연동화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초등반'은 학기 중에는 방과 후 공부방을 운영하고, 방학 중에는 초등학교 교과목 및 각종 대안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청소년반'은 남한 학교 진학에 필요한 기초 교과목 학습, 남한 문화 적응에 필요한 체험학습, 자치 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한다(윤상석 2009, 45).

'하나둘학교'는 탈북청소년을 위한 최초의 교육지원프로그램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교사 수급의 어려움, 실력 차이에 따른 개별 수업의 불가, 통일부라는 정부 조직이 갖는 교육적 마인드의 부족, 3개월이라는 교육 기간 등은 새터민 청소년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에는 미약하였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장문강 2008, 198).

4) 한겨레중고등학교 개교

'한겨레중고등학교'는 학교법인 전인학원이 2006년 3월 설립한 경기도교육청 관할 특성화 사립학교이다. 이 학교는 탈북학생들이 남한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일반 학교로 전 · 편입학하기 전의 디딤돌 학교로서 전환기 교육 역할을 하고 있다. 탈북학생들은 하나원에서의 입국 초기 3개월 교육이 끝나고 나면 지역별로 학부모들의 정착지에

따라 진로상담을 통해 일반 학교, 한겨레중고등학교, 대안학교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전·편입학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이들 중에서 일반 학교에 곧바로 가서 적응하기 어려운 탈북 중·고등학생들의 경우 기숙사가 갖춰져 있는 한겨레중고등학교에 전·편입하여 학업 보충과 사회 적응기를 거친 후에 일반 학교로 전·편입하도록 되어 있다(유삼목 2019, 46-47). 하지만 이 학교에서 졸업까지 하는 학생들도 있으며, 학교 홈페이지의 자료에 따르면 2019년에는 45명, 2020년 29명, 2021년 33명, 2022년에는 23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다.

한겨레중고등학교 개교는 두 가지 의의를 지닌다. 첫째, 이 학교는 국내 최초로 탈북학생의 교육을 위한 정규학교이다. 둘째, 교육부가 최초로 탈북학생들의 교육지원정책에 본격적으로 관여하는 출발점이 되었다. 이 학교는 경기도교육청 산하의 사립학교이며, 고등학교 공교육 과정의 교육 프로그램에 기반하여 운영되고 있다. 다만 학교의 설립 목적이 일반 학교로의 전·편입을 위한 디딤돌 학교로 상정되었기 때문에, 탈북학생의 교육정책 전반을 아우르는 교육지원정책으로서는 한계가 명확하다.

2. 탈북학생 교육지원정책 수립·확장기: 2008년 이후

1) 북한이탈주민 학력 인정체제 구축

1997년 시행된 북한이탈주민지원법 제13조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은 북한 또는 외국에서 이수한 학교 교육의 과정에 상응하는 학력을 한국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한편 시행령 제27조에는 "보호대상자가 북한 또는 외국에서 이수한 학력은 교육관계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이를 인정한다"라고 되어 있다. 즉 교육관계법령에 북한이탈주민의 학력 인정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 기준이 마련된 것은 2008년이다.

2008년 2월「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96~98조를 개정하여 탈북학생들의 취학 상황개선 및 탈북주민의 학력 인정을 위한 체제를 구축하였다. 이에 각 시·도 교육청 교육감 산하에 학력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북한이탈주민의 학력 인정을 심사하도록 하였다. 학력심의위원회는 북한에서의 파행적인 교육 운영 상황을 고려하여, 북한 교육 기간과 현재 연령, 본인의 취학 의지 등을 고려하여, 계속 교육과 훈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졸업 학력을 심의, 인정하는 권한을 지닌다. 교육부는 시·도 교육청별 학력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한 규정을 마련하여 지원하였으며, 2009년 1월 16개 교육청별 학력심의위원회가 구성 · 완료되었다(한만길 외 2009, 50).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을 통한 북한이탈주민 학력 인정체제가 구축됨에 따라 이전에는 상당히 불명확하게 진행되었던 학력 인정이 명확한 법률적 근거와 절차를 가지게

되었다. 한편 2006년 한겨레중고등학교의 개교 및 운영과정에서 교육부의 관여가 부분적으로 이루어졌다면, 2008년 시행령의 개정은 교육부가 초중고 전반을 아우르는 교육과정에서 탈북학생지원정책을 계획하고 시행하는 중요한 기점이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2)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 개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된 2008년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교육부의 탈북학생 지원정책이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시점이다. 동년 6월에 최초로 탈북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공식적인 교육지원계획으로 「2008년도 새터민 청소년 교육지원계획」이 수립되었고,[7] 12월에는 종합적인 「북한이탈청소년 교육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입국 초기 하나원 교육단계에서부터 "디딤돌 학교"로서 한겨레중고등학교에 대한 지원, 정규학교에서 멘토링을 비롯한 맞춤형 교육을 강화하고 정규학교 외의 민간 시설 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등을 통해 모든 탈북청소년에게 정착 단계별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하였다(한국교육개발원 2015, 32).

2009년 7월 교육과학기술부는 탈북청소년에 대한 종합적 교육 대책을 수립하였으며, 그 일환으로 한국교육개발원에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를 설립하여 탈북학생 교육지원 사업을 수행하기 시작하였다(한국교육개발원 2022, 26).

간단히 정리하자면 2008년은 교육법시행령을 통해 교육부의 탈북학생지원정책의 범위가 특정 학교를 넘어서 전반적인 교육지원 영역으로 확대되었고, 공식적으로 탈북학생 전체 대상의 교육지원정책을 수립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격적인 탈북학생 교육지원정책이 시행된 것은 2009년이며, 그 정책의 핵심 내용은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의 설립이다.

2009년부터 본격적인 탈북학생 교육지원정책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은 교육부의 탈북학생 교육지원사업의 예산 편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 사업에 책정된 2008년 예산은 총 6억 6천만 원이었고, 2009년에는 30억 원으로 4.5배 이상 증가하였다. 2014년부터는 매년 40억 안팎의 예산이 책정되고 있다.

〈표 19〉 교육부, 탈북학생 교육지원사업 예산 (단위: 백만 원)

연도	2008	2009	2010	2014	2015	2016	2017
사업비	660	3,000	3,300	4,200	4,100	3,955	4,215

출처: 교육부(2008, 2010, 2014, 2015, 2016, 2017).

7) 2008년의 「새터민 청소년 교육지원계획」에는 2007년의 탈북학생 지원 현황을 열거하고 있다. 따라서 2008년 이전에도 탈북학생 지원정책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이 이전에 공식적인 지원계획이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의 필요성은 2000년대 중반부터 제기되었다. 이를테면 정병호[8](2005)는 탈북청소년들이 겪는 문제는 ① 기근과 영양결핍으로 인한 성장 발육상의 문제, ② 탈출과 유랑과정에서 입은 심리 · 정서적 상처, ③ 남북 간의 교육 내용 차이로 인한 학력 문제, ④ 북한에서 이수한 제도교육 연한과 나이와의 차이로 인한 학력 문제 등으로 개인적인 노력만으로는 극복하기 어려운 복합적인 문제를 안고 있음을 지적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탈북청소년 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지닌 기관으로 '새터민(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를 정책적으로 설립하고 지원해야 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 기관의 역할로는 1) '학력평가위원회' 설치, 2) 진로 및 생활 상담, 3) 심리검사와 심리치료, 4) 현장체험 교육 지원, 5) 부모 교육, 6) 교사 교육 및 연수프로그램 등을 제시하였다.

2009년 설립된 이후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는 위에서 제시된 역할을 훨씬 웃도는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여기에는 개별 학생을 위한 맞춤형 교육자료 및 프로그램 개발 · 운영, 교사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프로그램 운영 및 매뉴얼 개발, 학부모 역량 개발, 민간 교육시설 지원, 교육포털 구축 및 자료 축적, 탈북청소년 교육 실태조사 및 연구 등 탈북학생 교육지원을 위해 필요한 거의 모든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의 다양한 사업들은 매년 결과 보고와 평가를 거쳐 다음 연도에 반영하고 있다. 〈표 20〉에서는 민간 시설 지원, 포털 구축, 자료 축적, 실태조사와 연구 등의 사업은 제외하고, 학생교육지원과 교원 지원 등 2009년~2020년까지 탈북학생의 교육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신규 사업들만을 간추려서 정리하였다. 거의 매년 신규 교육 프로그램이 새롭게 계획되고 있으며, 이는 성과관리체계가 원활하게 작동하기 때문이다.

〈표 20〉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 연도별 탈북학생 교육 관련 주요 신규 사업 현황

연도	사업명	사업내용
2009	· 기초학력진단도구 개발	· 초등학생용 국어, 수학 진단도구 개발
	· 하나둘학교 교육과정 개발	· 하나원 하나둘학교 교육과정 및 교재 개발
	· 맞춤형 교육자료 개발	· 초등학생/중학생용 국어(논술) 교재 개발 (총4종) · 중학생용 수학 교재(교과서) 개발 (총3종)
	· 교원 연수	· 관리자연수 실시 / 교사연수 실시
	· 교사용 매뉴얼 개발	· 교사용, 관리자용 매뉴얼
	· 탈북교사 아카데미	· NK교사 아카데미 운영
	· 밀집학교 지원	· 전담 코디네이터 배치
	· 민간교육시설 지원	· 교육지도자 합동연수 / 재정지원사업 평가, 컨설팅
	· 리더 양성 프로그램	· 탈북청소년 리더 양성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8) 정병호 교수는 2001년~2005년까지 '하나둘학교'의 교장과 명예 교장으로 활동하였다.

연도	사업명	사업내용
2010	· 기초학력진단도구 개발	· 중학생용 국어, 수학 진단도구 개발
	· 하나둘학교 교육과정 개발	· 교재개발(실험본)-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 도덕, 역사
	· 남북한 교과용어 비교 사전 개발	· 국어(초·중등), 수학(초·중등), 사회(중등), 국사(중등), 도덕(중등) 비교사전 개발
2011	· 탈북학생 맞춤형 보충교재 개발	· 초등수학(1~6학년) 교재 개발 · 초등수학 익힘책(1~6학년) 교재 콘텐츠 개발
	· 남북한 교육용 영상자료 개발	· 초등학생(4~6학년) 교육용 애니메이션 개발
2012	· 표준(보충)교재 개발	· 하나둘학교에 탈북학생 전문상담교사 파견
	· 사례관리 시스템 구축	· 학생별 학습관리 프로그램 개발(초등학교용/중학교용) · 탈북학생 성장멘토링 프로그램 개발 및 시범 운영
	· 기초학력 향상 등 교육자료 개발	· 학습능력 증진 맞춤형 보충교재 개발 - 역사, 한국사회 교재 개정 발간 / 학습방법, 생활경제 교재 발간
	· HOPE 프로그램 운영	· 잠재력 갖춘 탈북학생 역량 개발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2013	· 표준(보충)교재 개발	· 초등학교 1,2학년 국어, 수학 / 중학교 1학년 국어, 수학, 사회, 과학 표준(보충) 교재 보급본 개발 · 초등학교 3,4학년, 중학교 2학년 국어, 수학, 사회, 과학표준(보충)교재 실험본 개발
2014	· 표준(보충)교재 개발	· 초등학교 3,4학년, 중학교 2학년 국어, 수학, 사회, 과학 표준(보충)교재 보급본 개발, 보급 - 12종 교재 개발, 보급 · 초등학교 5,6학년, 중학교 3학년 국어, 수학, 사회, 과학 표준(보충)교재 실험본 개발 - 12종 교재 개발
2015	· 연구학교 운영 지원	· 탈북학생 교육 정책연구학교 운영 지원 - 12개 정책연구학교 공통과제 및 학교별 수행과제 운영 지원
	· 표준(보충)교재 개발	· 초등학교 5,6학년, 중학교 3학년 국어, 수학, 사회, 과학 표준(보충) 교재 개발 - 22종 교재 개발
2016	· 삼죽초 심리상담 지원	· 삼죽초 탈북학생 심리상담 지원
	· 표준(보충)교재 수정·보급	· 초3~6학년용, 중1~3학년용 교재 인쇄 및 보급
	· 문해력 증진교재 개발	· 문해력 증진교재 3종 및 교사용 참고자료 1종 개발 및 보급
2017	· 정착지 초기 심리상담 지원	· 심리상담이 필요한 초·중·고 재학 탈북학생 심리상담 지원
2019	· 한국어 교육 자료 개발	· 탈북학생 입국 초기 한국어 교육 자료 개발 및 보급
	· 성장 멘토링(VASI)	· 현직 교원과 탈북학생 1:1 결연 통해 2년 이상 장기 멘토링 실시
2020	· 한국어 교육 지원	· 돋움한국어 교사용 지도서 개발 및 보급

출처: 한국교육개발원(2022), 28-65. 저자요약.

3. 소결

본 장에서는 1997년 이후의 탈북학생 교육지원정책을 두 시기로 크게 나누어 고찰하였다. 첫 번째 시기는 1997년~2007년 동안이다. 이 시기에는 북한이탈주민의 교육지원에 대한 공식적인 정책이 북한이탈주민지원법을 통해 그 토대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북한이탈주민지원법의 주체는 통일부였으며, 교육지원과 관련된 두 개의 조항 즉, '학력 인정'과 '기존의 과정에 상응하는 교육 지원'이라는 규정은 법적 기반 이상의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였다. 1999년 개소한 하나원에서의 교육은 적응과 정착을 위한 프로그램에 집중하였으며, 탈북청소년을 위한 최초의 교육지원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는 하나둘학교는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 교육효과를 거두기에는 크게 미흡하였다. 2006년 설립된 한겨레중고등학교는 탈북청소년을 위한 최초의 정규학교로 운영되었지만, 탈북학생 전반을 아우르는 교육지원정책으로서는 한계를 보였다.

두 번째 시기는 2008년 이후이다. 이 시기에는 교육부에서 다양한 교육지원계획이 수립되기 시작했고 시행에 옮겨졌다. 2008년에는 「새터민 청소년 교육지원계획」과 종합대책의 성격을 띠는 「북한이탈청소년 교육 지원 대책」이 수립되었으며, 2009년 7월에는 탈북청소년에 대한 종합적 교육 대책이 수립되었다. 이 시기에 수립된 계획이 시행에 옮겨진 것은 2009년부터이다. 2009년 탈북학생 교육지원 예산은 전년에 비해 4.5배 증가하였으며, 이보다 중요한 것은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의 설립이다. 이 센터는 이전에 다양한 연구논문들에서 지적되었던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을 수용하여 폭넓은 사업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수립된 정책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한 다양한 오류에 대한 개선책을 도출하여 다음 연도 사업 계획에 충실하게 반영하고 있다.

앞의 〈표 5〉와 〈표 6〉에서 2011년 탈북학생 학교 부적응 비율의 감소와 2010년 학업중단율의 급격한 감소를 확인하였다. 다시 말해서 2010년은 탈북학생 학업중단율 감소의 변곡점이다. 이 시점은 교육부가 탈북학생 교육지원정책 전반에 대한 계획과 대책을 수립한 직후이자, 2009년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가 다양한 사업을 실행에 옮긴 이후이다. 결론적으로 2010년 탈북학생 학업중단율 감소의 결정적인 요인은 탈북학생 교육지원에 대한 전반적인 대책 수립과 계획의 적극적인 실행에 있다.

Ⅴ. 맺음말

본 논문의 서두에서 '탈북학생 학교 부적응'의 비율은 2011년에, '탈북학생 학업중단율'은 2010년에 급격히 감소하였고, 이후에도 꾸준한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가정의 경제 수준, 부모의 소득과 취업 여부가 학업중단율과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이라는 선행 연구성과들을 고려할 때, 탈북학생 학업중단율 감소에 북한이탈주민의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 간에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라 가정하였다. 또한 탈북학생에 대한 교육지원정책의 변화가 학업중단율 감소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가정도 하였다.

북한이탈주민의 사회경제적 여건과 탈북학생 지원정책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 위의 두 가지 가설은 모두 타당하다.

첫째, 북한이탈주민 사회경제적 여건과 관련된 모든 지표의 꾸준한 상승세는 탈북학생 학업중단율의 감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삶의 만족도에 대한 주관적 평가는 한국 사회에 비해서도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사회경제적 지위, 가구소득, 경제활동 참가율, 고용률 등의 지표는 꾸준히 상승하고 있고, 상승률은 한국 사회보다 높다. 한편 한국에서의 거주기간이 길수록 북한이탈주민 사회경제적 여건의 수준은 훨씬 더 높았다. 2020년 이후 한국 입국자가 급감하는 추세를 고려할 때, 북한이탈주민의 평균 거주기간은 매년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사회경제적 여건과 관련된 지표의 상승세 역시 증가할 것이다. 이러한 추세를 고려할 때, 탈북학생 학업중단율도 현재 대비 더 감소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탈북학생 교육지원정책의 변화는 2010년의 급격한 학업중단율 감소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1997년부터 2007년까지는 탈북학생에 대한 교육지원정책이 부재하였거나 제한적이었고, 정책의 초점은 한국 사회에의 적응과 정착에 맞춰져 있었다. 2008년부터는 탈북학생 교육지원정책의 주관 부처가 통일부에서 교육부로 완전히 이관되면서 탈북학생 교육지원 계획과 종합적 교육 대책이 수립되었으며, 2009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2009년 탈북학생 교육지원사업의 예산은 전년 대비 4.5배 증가하였고, 무엇보다도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가 개설되면서 교육자료와 프로그램 개발, 학부모 역량 개발, 민간 교육시설 지원, 포털 구축 및 자료 축적, 교육실태조사 및 연구 등 탈북학생 교육지원과 관련된 거의 모든 내용을 포괄하는 사업이 시행되었다. 즉 2010년 탈북학생 학업중단율 감소추세에 변곡점이 발생한 결정적인 원인은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 개설과 적극적인 운영이다.

참고문헌

- 김범구. 2012. 청소년 학업 중단에 대한 연구동향 분석. 청소년학연구 19(4), 315-337.
- 김미령. 2007. 북한이탈 주민의 삶의 만족도에 관한 연구. 임상사회사업연구 4(3), 19-39.
- 김보미 · 이정민. 2019. 탈북 청소년 연구의 20년 동향분석: 1999년~2018년 연구 중심으로.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9(8), 1265-1289.
- 김안나 · 최승아 · 김효진. 2023. 북한이탈주민의 사회통합 실태와 영향요인 분석. 사회복지연구 54(1), 161-186.
- 김영하. 2010. 다문화사회와 새터민 청소년의 교육문제. 윤리교육연구 21, 223-248.
- 김지수 · 김선 · 김희정. 2018. 탈북청소년 교육정책에 대한 고찰: 토대역량 접근법을 중심으로. 교육사회학연구 28(4), 31-55.
- 김현정 · 박선화. 2017. 소수자 정책 관점에서 본 탈북청소년 교육지원 제도. Journal of North Korea Studies 3(2), 4-28.
- 장문강. 2008. 새터민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관한 연구: 다문화교육 관점을 중심으로. 청소년문화포럼 19, 196-234.
- 문희정. 2012. 다문화관점에서의 탈북청소년에 대한 국가 교육정책 분석: 교육과학기술부를 중심으로. 교육연구논총 33, 145-166.
- 박창남 · 도종수. 2005.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사회복지정책 22, 281-303.
- 박혜랑. 2018. 탈북청소년교육 연구동향.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8(24), 641-663.
- 양영은 · 배임호. 2010. 학업중단 북한이탈 청소년의 적응과정에 관한 질적연구. 사회복지연구 41(4), 189-224.
- 원지영. 2009.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가정 내 사회적 자본이 청소년의 학업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16(9), 125-150.
- 유삼목. 2019. 탈북학생 교육 체계 개선 방안 연구: 입국초기 및 전환기 교육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윤상석. 2009. 새터민청소년 지원 거버넌스 연구: '하나둘학교' 운영사례를 중심으로.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수연. 2008. 새터민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관한 질적 분석. 청소년학연구 15(1), 81-113.
■ 이은혜. 2019. 탈북청소년을 위한 교육지원 변화 분석. 다문화와 평화 13(3), 24-39.
■ 이항규. 2006. 새터민청소년 학교적응 실태와 과제. 교육비평 21, 193-207.
■ 장민수 · 이재철. 2016. 북한이탈주민 젊은 세대는 행복한가?: 삶의 만족도 및 삶의 만족도를 결정하는 요인 분석. 사회과학연구 42(2), 277-301.
■ 정병호. 2005. 탈북청소년의 현황과 교육지원센터의 필요성. 한국청소년시설환경학회 국제심포지엄, 134-145.
■ 정진웅. 2004. '적응'을 넘어서: 탈북 청소년 교육의 새로운 방향 모색. 열린교육연구 12(2), 179-194.
■ 한만길 · 윤종혁 · 이향규 · 김일혁. 2009. 탈북학생의 교육실태 분석 및 지원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홍성효 · 장수명. 2022. 통계자료를 활용한 취약계층 청소년의 취약성 진단과 지원정책 평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교육과학기술부. 2008. 새터민 청소년 교육지원계획.
■ 교육과학기술부. 2010. 탈북청소년 교육지원 추진계획.
■ 교육과학기술부. 2012. 탈북학생 주요통계 자료.
■ 교육부, 2008, 2008년도 새터민 청소년 교육지원계획
■ 교육부. 2014, 2015, 2016, 2017. 탈북학생 교육지원 사업 계획.
■ 교육부. 2022. 2022년 탈북학생 통계 현황.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남북하나재단). 2012, 2014,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북한이탈주민실태조사.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남북하나재단). 2016, 2022. 북한이탈주민 사회통합조사.
■ 통계청. 2022. 한국의 사회지표.
■ 통일부. 2003. 통일백서.
■ 통일부. 2022. 북한이탈주민현황.
■ 한국교육개발원. 2015. 탈북청소년교육백서.
■ 한국교육개발원. 2022.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 운영 사업 14차년도 결과보고서.

● 투고일: 2023.07.04. ● 심사일: 2023.08.11. ● 게재확정일: 2023.08.21.

| Abstract |

Analysis of change factors in the dropout rate of North Korean refugee students

- Focusing on changes in socio-economic conditions and educational support policies

Kim Inseong (Korea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 causes of the decrease in the dropout rate of North Korean Refugee students since 2010. There are two research subjects. The first is the change in the social and economic conditions of North Korean Refugees. The second is the change in the educational support policy for North Korean refugees, which has had an impact on the reduction in the dropout rate. As a result of the study, it was confirmed that there is a correlation between changes in the socioeconomic conditions of North Korean refugees and a decrease in the dropout rate of North Korean refugees. On the other hand, the establishment of the North Korean Refugee stuents education support policy in 2008 and the establishment of the North Korean Youth Education Support Center in 2009 had a decisive effect on the reduction of the dropout rate.

〈Key words〉 North Korean Refugee Students, North Korean Refugees, School Dropout Rate, Educational Support Policy, Socio-Economic Conditions, North Korean Youth Education Support Center